무안군 산업단지 조성 많지만 입주기업이 없다

항공특화단지 분양대금 미납 물류 업종 유치 사실상 중지 K푸드단지 2년째 타당성 조사만 몽탄식품단지·운남일반산업단지 투자 지연·시설 미비 진척 없어

무안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들이 장기 지연하거나 표류하고 있어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4차 산업 전환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의 땅'을 내세우며 추진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래 100년 번영'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의 핵심 산업이자 '항 공특화도시'의 상징으로 추진된 무안항공특화산 업단지(MRO)는 사업 준공 후에도 분양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총사업비 466억 원 전액을 군비로 투입했지만, 분양계약자인 (주)무안에어로테크 닉스(무안에어로)가 48억원의 중도금을 내지 않 아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MRO산단은 2020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됐지만, 항공MRO와 물류 관련 업종 유치는 사실 상 정체 상태다. 전액 군비로 추진된 사업이 투자기업의 책임 불이행으로 흔들리면서 "세금만



망운면 피서리에 조성된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가 항공MRO와 물류 관련 업종 유치에 실패하면서 폐 허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쏟아붓고 실질적 성과는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무안K푸드융복합산업단지'는 사업 개시 2년이 지나도록 타당성 조사에 머물러 있다. 무안군현경면 양학리·동산리 일원 91만㎡ 부지에 1661억원을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실시설계나 지정고시 단계도 밟지 못했다.

문제는 사업 지연이 행정 혼선에 있다는 점이

다.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문제를 밀어 붙이며 산업단지 사업을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이 전남도가 "K푸드산단 의 3자 협약에 김영록 지사 서명을 포함하라"라고 요구한 데 반발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것이다.

무안군은 K푸드융복합산업단지 사업 진행과 관련 전남개발공사가 타당성 용역 중으로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몽탄식품특화농공단지 사업 역시 졸속 행정과 관리 부실의 대표 사례로 꼽히며 군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16년 착공해 2021년 준공까지 총 86억 원(국비 22억, 군비 57억)을 들였지만, 폐수 처리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완공됐다. 결국 5년 이 지난 지금도 폐수처리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입주한 업 제도 두 곳뿐이다.

2015년 착공된 운남일반산업단지도 10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총 500억원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자는 토지매입과 조성이 60% 됐다고 주장하지만, 군은 50% 정도라며 맞서며 5차례 사업 연장을 거듭하고도 민간 업체의 투자 지연, 시설 미비 등 진척이 없다.

무안군은 지난 2023년도에 12월 조건부로 또다 시 연장 승인했지만, 전남도 역시 지연 산업단지 는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연장은 특별한 사업 진행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정책 전문가는 "무안이 전남 서남권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단지별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남도와의 협력 관계 를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회의 땅'을 약속했던 산업단지들이 언 제쯤 현실의 땅으로 완성될지, 무안군의 행정력과 책임감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덧붙였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인구 1천여명 급증 시범사업 계획인구 초과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재논의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 사업) 계획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기본소득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급방식 등을 다시 확정할 방침이다. 신안군 인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 선 정 결과를 발표하기(지난달 20일) 이전인 지난 9 월 말 3만8883명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선정 이 후 지난 달 31일 기준 3만9903명으로 1020명 급 증했다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당시 내년 사업적용 계획인구를 3만 9816명으로 산정하고 사업비를 확정받았다.

당시 확정된 신안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사업비는 1929억원이다. 정부에서 정한 기본소득 15만원과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금에서 5만원을 추가해 개인당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계획인구를 87명 초과하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고 신안군은 밝혔다.

신안군은 계획인구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초 과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갑자기 전입인구 증가로 계획 인구를 초과하면서 지급방식을 신안군 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다시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액 20만원에는 변함이 없으나 지급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월곡·칠곡·항월항 100억대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영광군 홍농읍 월곡·칠곡·항월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영광군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2026년부터 4년간 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과 어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 지역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과 정착을 유도해 어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핵심 공모사업이다. 영광군은 공모 준비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이번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방파제, 물양장 확보, 부 잔교 설치, 어구창고 신설 등 어촌 생활 인프라 확 충과 안전성 강화 사업이 포함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월곡·칠곡·항월항 일대를 중심으로 어촌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조성하겠다" 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기자 kcw@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문화재 지정 기념우표 2종 발행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영암 시종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기념해 우표 2종 세 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문화적 변화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 7월 7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고분군은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와 내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과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 등 대형 고분 2기로 구성돼 있다.

내동리 쌍무덤에서는 금동관 등 귀중한 유물이 출토돼 당시 활발했던 문명과 외래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며,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은 영산 강 유역을 대표하는 방형 석곽 구조의 대형 고분으

로 주목받고 있다.

기념우표는 오는 14일 오후 '2025 마한역사문 화제' 개막식과 함께 영암프렌즈샵에서 판매를 시 작한다.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공정한 구매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1세트 2종으로 한정 판 매될 예정이다.

관광마케팅팀 김재훈PD는 "이번 기념우표 발행은 영암의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분군이 마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유산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김희수(오른쪽) 진도군수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완도군 '섬주민 온라인 신청 플랫폼' 등 새 시책 10건 선정

완도군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규 시책 아이 디어를 발굴한 결과 '섬주민 온라인 신청 플랫폼 도입' 등 10건을 선정했다.

완도군이 최근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군민 불편 해소 신규 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35건이 접수됐다.

이를 대상으로 시행 가능성 검토와 우수 시책 심 사를 거쳐 1차 25건으로 압축한 데 이어 신규 시책 보고회에서 제안자의 의견을 듣고 최종 10건을 선 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시책은 ▲개발행위허가 등 허가 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지방세 프로그램 연 계 반송 우편 관리 시스템 도입 ▲불법 주정차 단 속 문자 알림 서비스 ▲버스 이용 실태 데이터 시 스템 구축 ▲섬 주민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플랫 폼 도입 등이다.

선정된 시책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전남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지역 인재 육성 등 교육혁신 추진

진도군이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자치협 력지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김희수 진도군수, 박금례 진도군 의회의장과 군의원, 전남도교육청과 진도교육지 원청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발전과 지역교 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이다. 협약은 2026년부터 2029년 까지 4년 동안 유지된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과 진도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 8기 군정 방침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기자 js7777@kwangju.co.kr

